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견인제도 있으나...

‘알박기식’ 압제차량 시민 불편 관련법 개정해 견인 가능하지만 한달 이상 방치 여부 확인 어려워 ‘과태료·계도’ 소극적 대응 그쳐

광주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찾아 일명 ‘알박기식’ 장기 주차를 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 주차된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찾은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는 장기 방치된 차량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차량 주변에는 풀이 창문에 닿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고 차량 외관은 장기간 주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더러운 모습이 었다.

근처에서 산책하던 50대 이모씨는 “저녁마다 운동할 겸 공원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같은 자리에 주차된 차들이 가끔 보인다”며 “여기는 주차 공간이 많아 괜찮지만,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갈 때마다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아 항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광산구 하남3지구의 한 공영주



지난 8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주변으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차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차들 사이 오랜 기간 움직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승용차가 발견됐다. 해당 승용차는 잔디와 풀들이 주변을 둘러싼 채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 었다.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는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갖길 주차를 한 차량들이 줄을 지어 도로 혼잡을 빚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장기 방치 주차를 한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광주 지역에서는 강제 견인된 경우가 없어 고정 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부터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차의 보관 장소 등은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된다.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럼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의 최근 3개월간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단속 견인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기 방치 차량 중 단속 대상인 한 달 이상 장기 방치 차량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이라고 해도 법에 규정된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을 찾기 어렵다. 차량을 주차장 한 칸이라도 이동하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캠핑카나 대여차량 등의 장기 주차의 심 구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 경우 장기 방치 차량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단속 스티커 부착 후 차량 주인과 연락을 시도해 과태료 부과, 계도 등을 시행 중이다”며 “장기 주차가 많은 캠핑카의 경우 지난해부터 관내 2곳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무료로 운영하면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트레일러와 캠핑카 특성상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워 유료화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불법체류자 검거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후사경이 파손됐

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A씨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

정성아 기자

‘가급’ 국가보안시설 한빛원전 출입보안 ‘구멍’

출퇴근 버스기사 출입증 도용 2020년 이후 부정출입 1090건

대통령실과 같이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철통보안’을 지켜야 할 원전이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 출입증이 수개월간 도용되는 등 출입보안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국제공항 등과 함께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 출입자’는 반드시 직원과 동행하고, ‘수시 및 상시’ 출입자의 경우 경찰을 통한 신원조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의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출입증 발급 이후에도 철저한 출입증 관리를 위해 원전 출입증을 지연 반납하면 1개월 출입 정지, 미반납 시 6개월 출입 정지에 처한다

하지만 한빛원전에 정식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출퇴근버스 기사 A씨가 퇴사한

B씨의 수시출입증을 사용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한빛원전 정문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병거나 결근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인물인 C씨가 B씨의 출입증을 그대로 사용해 출퇴근버스를 대리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2월 퇴사한 B씨가 10월께 다른 회사에서 출입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고 A씨에게 6개월간 출입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원전은 이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심각’, ‘경계’ 수준일 경우에만 원안위에 보고하게 돼 있고, 발전소 내부로 통과했기 때문에 경미한 일이라는 것이 원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빛원전의 부정출입과 관련한 보안 문제가 이 밖에도 더 있던 것으로 조

사됐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부정 출입 건수가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부정 출입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빛원전(309건)으로, 서울(266건), 월성(206건), 고리(170건), 한울(13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수원은 상급 관리·감독 기관인 원안위에도 원전 부정 출입 사건을 비롯한 1000여 건의 부정 출입에 대해 누락하고 단 11건만 보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인철 의원은 “국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운영돼야 할 원자력발전소에서 1000여 건의 부정 출입이 발생하는 것도 부족해 상급 기관에 축소·누락 보고 한 것은, 한수원의 보안 수준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현기 기자

무직 청년 대상 ‘사기성 작업 대출’ 20대 구속

‘보증 서 대출 도와주겠다’ 속여

무직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무직 청년들에게 보증을 서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관심을 가지고 연락한 광주, 부산 등 전국의 피해자 10명에

게 총 9300만원을 가로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청년인 피해자들이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에 출소해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4대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정성아 기자

“서울대 진학 실적 공개한 시교육청 공개 사과를”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촉구 “의학계열 입시 컨설팅 안내”

최근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4일 “국가인권위가 2012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서울대 학교 신입생 지역별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선 교육감 출범 이후 중단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고교에서 배출한 서울대 합격자 수는 해마다 100명 이상으로 파악했다. 내용은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입시 환경 변화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 목표가 의대로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이제 ‘입시 목

적지가 의학계열로 바뀌었다”며 입시 컨설팅을 하듯 학벌주의의 변화 양상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학벌주의를 굳게 만드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육의 성과를 특정 대학 입학자 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등급 비율 등으로 확인하려 할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사과와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은기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